

트럼프 시대 미러관계 전망과 한반도에 대한 함의

Online Series

2017. 02.08. | CO 17-04

현승수(국제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미국 대선의 중심 화두 중 하나는 러시아였다. 트럼프는 푸틴을 존경할만한 지도자로 칭송하는가 하면,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IS(이슬람국가)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가히 파격적이라 할 만한 친러, 친푸틴 노선을 드러냈다. 러시아에서도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정관계 인사들이 공공연히 트럼프 지지를 입에 올리며 그가 당선되면 미러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론을 설파했다. 러시아가 해킹을 통해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미 정보기관의 보고서, 거기에 트럼프가 푸틴에게 협조적일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성 추문과 관련된다는 언론의 보도는 미국 내 반러 정서를 부추기며 트럼프를 궁지로 몰기도 했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가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에 대한 보복 조치로 자국 내 러시아 외교관들을 추방했음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맞추방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이는 러시아 정부가 트럼프의 집권에 거는 기대의 크기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러시아에서는 트럼프의 승리를 푸틴의 승리로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있을 정도다.

미러 신 밀월 시대의 도래?

그렇다면 러시아가 이토록 트럼프의 집권을 바라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서방의 대러 제재를 조속히 해제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였던 크림 반도를 병합한 데 대한 보복으로 미국과 서방 주요국은 러시아의 에너지, 금융, 국방 분야에 대해 제재를 부과해 왔다. 때마침 국제 유가 하락과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 폭락도 잇따르면서 러시아는 이미 수년째 최악의 경제 상황을 겪고 있는 중이다. 사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직접적인 무역 규모는 크지 않다. 하지만 제재에 참가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들이며 미국은 이들 국가의 정부와 기업이 러시아와 협력하는 데에 제동을 걸어 왔다. 따라서 트럼프가 대러 제재의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제재 해제를 시사한 만큼 러시아가 거는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둘째, 국제 안보 협력과 관련된 문제이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러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집트와 리비아, 시리아 등지에서 러시아는 오바마의 미국과 번번이 충돌해 왔다. 중동 안정의 키를 쥐고 있는 강대국 간 갈등이 지속된다면 국제안보는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 이 밖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러시아 국경 쪽으로 확대되는 문제나, 미국이 나토와 함께 추진 중인 유럽 MD(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이 초미의 과제로 남아 있는데 모두 미러 간 협상 없이는 해결이 힘든 문제들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러 적대시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완화 혹은 개선된다면 러시아로서는 안보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된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 안에 포진해 있는 친러파 인맥이 푸틴의 세계 전략 추진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최대 석유회사인 엑손모빌(Exxon Mobil)의 최고경영자(CEO) 출신으로 국무장관에 지명된 틸러슨(Rex W. Tillerson)이나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 임명된 플린(Michael T. Flynn) 전 국방정보국장은 모두 푸틴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두터운 인물들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12년 러시아 정부로부터 우정훈장을 수여받은 바 있는 틸러슨이 상원 인준을 통과해 국무장관에 기용됨으로써 러시아는 국운을 좌우하는 에너지 개발 전략에서 최고의 우군을 만나게 된 셈이다. 러시아가 큰 기대를 걸고 있는 LNG 플랜트의 건설이나 북극해 개발, 시베리아 지역에서의 석유와 천연가스 탐사에 미국의 셀 가스 기술을 빌려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러시아 엘리트들은 미러 사이의 장밋빛 미래에 대해 기대반, 회의반이다. 트럼프가 지명한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인사들이, 그가 대선 과정에서

피력했던 친러적인 발언이나 정책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면서, 러시아 언론들도 과연 미리 신 밀월 시대가 열릴 수 있을지 우려하는 반응이다. 대통령 일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러시아와는 다르게 미국에는 삼권분립의 원칙이 엄격히 기능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미국의 대외 정책이 쉽게 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논조도 눈에 띈다. 특히 러시아가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NATO의 동방 확대나 유럽 MD 문제는 미국 대선이 치러지기 훨씬 전부터 결정된 사안인바, 트럼프 개인의 생각이 아무리 오바마의 그것과 다르다 해도, 쉽게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러시아 전문가들은 내놓고 있다. 하기가 냉전 종식 이후 너무 많은 것을 미국과 서방에 내줬다고 생각하는 러시아 역시도 유럽에서 제기되는 안보 관련 사안을 놓고 미국과 쉽게 타협하거나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푸틴과 트럼프의 개인적 의지가 미리 간 밀월로 연결되리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사안에 따라 부분적인 협력은 확대될 수 있겠지만,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갈등 기조가 지속될 개연성이 크다.

미러 관계 개선이 동북아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

하지만 만일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러 관계가 기대 이상의 협력 기조를 보이게 된다면 그것이 동북아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력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 미국과 풀어야 할 안보적 현안이 산적해 있는 중동이나 유럽 지역과는 달리, 동북아에서 러시아는 안보보다 경제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미국의 패권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제휴가 강화되면서 러시아는 동북아의 안보 문제에서 중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혹자는 트럼프의 대러 유화를 중국 견제책의 일환으로 보기도 하지만, 러시아가 미국과의 협력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시킬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러시아와 중국은 동북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단극 질서 구축과 패권 정책이 종식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의 실현을 위해 협력 관계를 강화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트럼프의 미국이 아시아에 대한 개입을 축소시킨다면 이는 러시아가 바라왔던 바이며, 다극적 세계 질서를 지향해 온 푸틴의 세계 전략을 도와주는 셈이다. 반대로 미국이 남중국해나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갈등하거나 아시아에 대한 개입 전략을 노골화한다면, 러시아는 일방적으로 미국을 편드는 행동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미중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러시아가 자임하는 것이지만, 그 성공 여부를 예측하기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한편, 미러 관계가 개선되면 동북아에서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발전 전략, 즉 신동방정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무한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인구가 희박하고 인프라가 미비한 동시베리아와 극동 지역 개발에는 자금과 기술이 필요하다. 푸틴이 의욕을 보이는 만큼 극동 개발이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미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한국과 일본은 물론, 친러적인 중국 조차도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하에서는 러시아와 마음 놓고 거래를 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미국의 입김이 사그라들면 일본도 러시아에 기술을 제공할 수 있고 중국의 금융기관도 대러 자금 공여가 쉬워질 것이다. 한국 역시 극동 개발에서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북핵과 역사 영토 문제 등으로 안보 딜레마, 아니 트릴레마(trilemma, 삼중고)가 상존하는 동북아 지역에 경제를 매개로 한 다자협력의 틀 짜기가 본격화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러시아의 극동 개발에 분명 플러스로 작용할 것이다.

러시아의 극동 지역 개발이 한반도에 주는 함의는 단순히 경제적 가치로만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로 촉발된 한반도의 안보 불안은 이미 신냉전이라는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노정하고 있다.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간 협력 기조는 진작에 깨졌고 일본은 파격적인 경제 협력 제안을 갖고 러시아에 접근하고 있으며, 한일 간 역사, 영토 갈등이 재점화되는 등 2017년 1월의 한반도 주변 정세는 그야말로 예측 불허의 상황이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및 대 한반도 정책의 윤곽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어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은 증폭 일로에 있다. 이러한 시국에 한국은 러시아와의 협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하게 원하며, 남북러 삼각 경협을 재가동을 통해 남북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러시아는 한국과 어떤 역사나 영토 갈등도 갖고 있지 않아 협력을 위한 기반이 튼튼하다.

한러 관계는 주로 미러 관계에 동조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우리의 선택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제 역학 관계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미러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이내 협력의 흐름을 탄다면 분명 우리에게는 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다. 트럼프의 미국이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며 갈등하게 될 경우, 러시아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자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 지렛대는 중국에 비해 크지 않지만,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중국이 하지 못하는 피스메이커(peacemaker)로서의 역할을 기꺼이 떠맡으려 할 것이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러시아는 대북 제재로 중단된 나진-하산 운송 사업을 비롯해, 남북러 삼각경협을 재가동을 우리에게 요구해 올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북한 체제의 붕괴를 용인할 가능성은 낮으며, 우리의 대북, 통일 전략은 이를 토대로 조율되고 입안되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예상되는 수많은 변수와 불확실성을 우리의 생존과 통일을 위한 기회로 포착하기 위한 노력은 섬세하면서 동시에 과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도 러시아는 통일 한국의 우호적이며 긍정적인 이웃으로 역할해야 하며, 또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KINU 2017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